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47호  
2020.3.2

## 정책동향

- 건설정책 분야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 영국과 싱가포르의 인프라 정책

## 시장동향

- 코로나19 확산이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

## 산업정보

- ESG, 건설기업 가치 제고 요소로 부각

## 건설논단

- 기본으로 돌아가기 vs. 스케일 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건설정책 분야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 처벌·관리 중심의 규제 강화를 통한 일자리 질 개선, 안전·품질 확보 등에 초점 -

### ■ 국토교통부, 2020년 4대(경제, 혁신, 포용, 공정) 업무추진 방향 발표<sup>1)</sup>

- (경제)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도록 노후산단 재생,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의 혁신 거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거점 간 교통 인프라 확충
- (혁신) 혁신기술 고도화,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 (포용)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는 따뜻한 포용 사회의 기반 조성
- (공정)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함께 잘 사는 나라’ 구현에 이바지

### ■ 국가 균형발전 인프라 사업의 조기 착수 및 투명성 강화 관련 규제 확대

- 15개의 인프라 건설사업(총사업비 21조 7,000억원)을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 발주), 기본 및 실시 설계 통합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함.
-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을 통해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을 민간공사로 확산(10월)하고, 적정 임금제를 전면 도입(방안 마련, 6월)하는 등 임금 보장 대책을 수립함.
  - 상습체불업자 공표 확대, 체불 방지 사업주는 상호협력평가·고용평가 가점을 부여(9월)함.
- 하도급 간접비에 대한 별도 지급규정 마련, 공제조합 의사결정 체계 개편 및 이익잉여금 처리기준 마련(7월)으로 건설업의 투명성을 강화함.

### ■ 우량 중소기업 가점 및 건설산업 구조개편 후속 대책 마련

- 국토부는 ‘100대 혁신 뿌리기업’을 선정하고(8월) 시공능력평가 가산, 입찰평가 가점,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우선 입주 등을 통해 이들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1) 본고는 2월 27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2020년 업무계획” 중 건설산업 정책 분야(인프라 투자, 도시 및 부동산 정책 제외)의 내용을 기반으로 요약·작성함.

- 우량 건설기업에 대한 공제 보증수수료 인하(최대 5%)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인하(30%), 하도급 간접비 지급 등 정책을 지속 추진함.
-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 진출(2021년)에 대비해 실적·주력 분야 공시 등 제도를 완비하고, 전문업종의 대업종화(9월) 등 건설 산업구조 개편을 완료함.
- 대국민 공모를 통해 건설규제 전면 조사(3월) 후 「건설 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6월)할 계획임.

### ■ 건설현장 안전 관련 규제 강화 : 부실업체 벌점 강화, 안전 및 품질 검사 강화

-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를 300명대로 감축(2019년 428명, 14% 이상 감축)함.
  - 중대 사고시 재발 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를 불허(추가비용 발주자 부담)하고, 안전 부실업체 벌점을 강화하는 등 주체별(발주자·시공사) 책임을 확대함.
  -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 퇴출(6월) 및 감리비 지급 확인 대상 확대(11월), 고위험 공사 전반으로 작업허가제 확대(3월) 등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할 방침임.
  -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및 작업지킴이(유도원·신호수) 배치 의무화, 안전시설 설치비의 공사비 계상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함.
-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및 불량 자재 퇴출을 실시함.
  - 장기 미수검·불합격 장비 처벌 강화 및 건설현장 사용·도로운행 제한(10월), 고위험 기종의 검사 주기 단축 등 안전검사를 강화함.
  -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의무화(원격조종, 6월)할 계획임. 또한, 검사 기관 평가·관리 강화 등으로 타워크레인을 집중 관리할 방침임.
  - 한편, 레미콘 품질관리를 위해 불량 레미콘 납품 거부(또는 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을 강화(6월)할 예정임.
  - 건설자재의 생산·수입·판매자에 품질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자재·부재 범위를 확대(6월)함.
- 교통·물류 산업이나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진흥·지원 정책에 비하여 건설산업의 업무계획 내용은 사전 규제 강화 및 처벌·관리 강화 정책으로 평가됨.
  - 당위적인 차원의 정책 목표가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만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정책 목표 달성을 추구하면서도 기업이 효율적인 경영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인 규제 (incentive regulation)’ 개념의 산업 정책이 건설산업에서도 균형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함.

나경연(연구위원 · econa@cerik.re.kr)

## 영국과 싱가포르의 인프라 정책

-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의 연계 필요 -

### ■ 영국과 싱가포르, 범정부 차원의 인프라 정책과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 연계<sup>2)</sup>

-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국의 경제 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이를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영국 인프라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프라 투자 효율성과 성능 향상을 위해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을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 발주방식과 조달체계 개선을 포함하여 인프라 성능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투자 비용과 효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해 인프라 투자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종합적 이익을 높이려 함. 또한, 신기술 도입과 혁신을 통해 비용 감소와 성능 제고를 동시에 이루고자 함.
- 싱가포르는 전체적인 국가 발전 계획에 인프라 정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음.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도시개발과 인프라 정책을 종합하여 추진함. 인프라 경쟁력 세계 1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계획함.
  - 싱가포르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주로 건설 산업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사전 제작 및 조립(Design for Manufacturing & Assembly, DfMA), 그린 빌딩(Green Building), 통합 디지털 기술 활용 체계(Integrated Digital Delivery, IDD)와 관련된 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두 국가의 정책을 비교하면 여러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중장기적 비전 및 전략 제시,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적·유기적 정책 마련, 인프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 생산성 향상 노력,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 인프라 투자의 확대에 정리할 수 있음(<표 1> 참조).

2)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 “영국과 싱가포르의 인프라 정책 분석 -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의 연계를 중심으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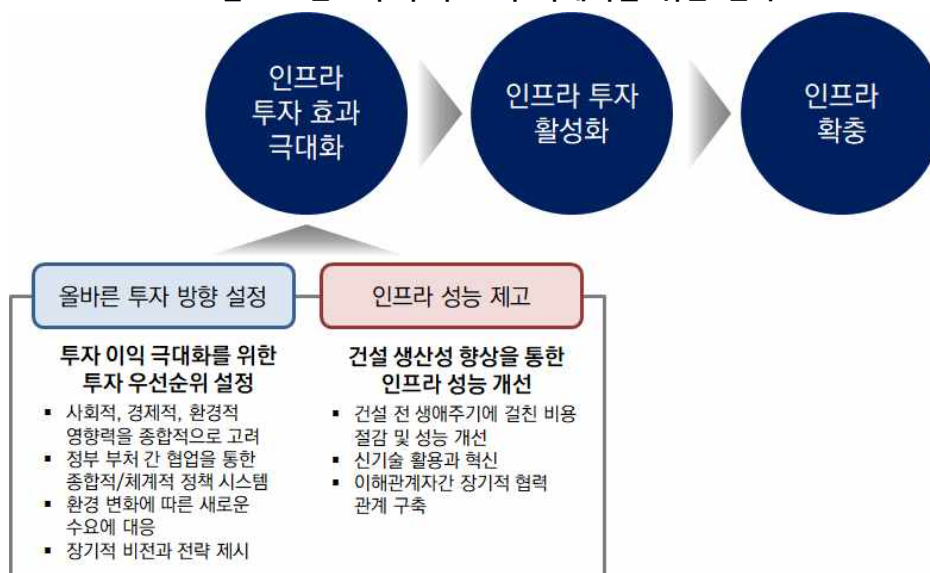
&lt;표 1&gt; 영국과 싱가포르 인프라 정책 비교

구분	내용	
	영국	싱가포르
인프라의 중요성 강조	• 경제 성장을 위한 생산성 증대와 이를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 강조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개발계획 하에 인프라의 중요성 강조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	• 장기적 인프라 비전 및 전략 제시	• 중장기적인 국가 개발계획 하에 인프라 정책 포함
통합적, 유기적 정책 마련	•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정책 마련	• 전체적 개발계획 하에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유기적 정책 마련
인프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 생산성 향상 노력	• 건설 전 생애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방안 제시 • 종합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 제시 • 신기술 도입과 혁신 강조	•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새로운 인프라 수요에 대응	• 디지털, 환경, 에너지, 교통 인프라 확대	•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새로운 이동수단 사용 증가 등에 대응한 인프라 확대
인프라 투자 확대	• 공공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투자 확대	•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와 안정적 이행

## ■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이 연계될 때 인프라 투자 효과 극대화

- 인프라 정책과 건설 생산성 향상정책이 연계될 때 투자 효과 극대화, 투자 활성화, 인프라 확충 및 성능 제고 순서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
-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투자 방향 설정과 건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인프라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그림 1> 참조).

&lt;그림 1&gt; 인프라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



이지혜(부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 코로나19 확산이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

- 수요 감소에 따른 하방 압력 대폭 증가, 2주간 20% 급락 -

### ■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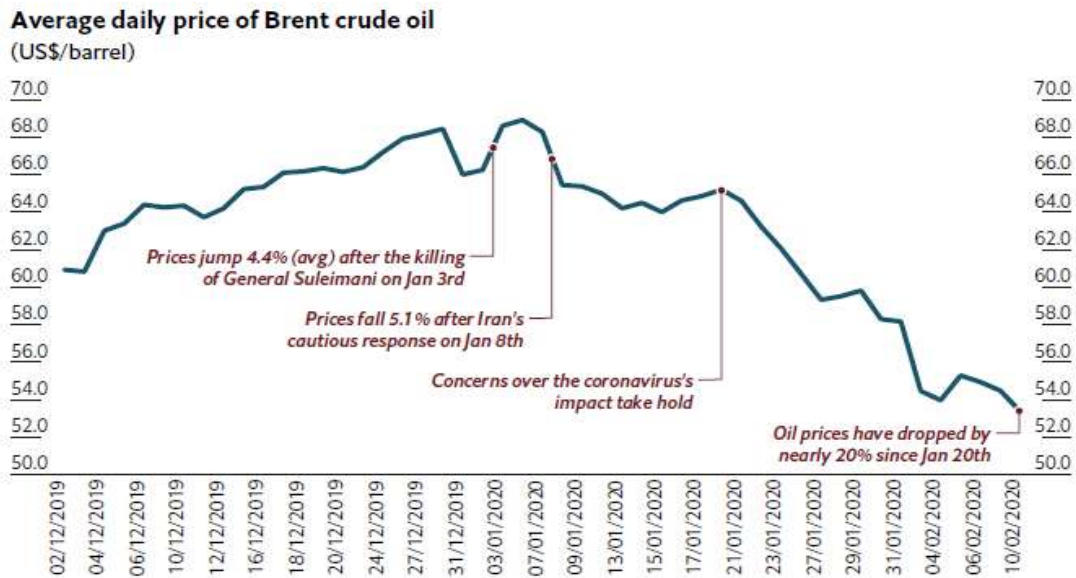
-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는 소폭 조정에 그쳤지만, 최근 확산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시선이 대폭 증가함.
  - 세계 경제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4% 수준에서 2018년에는 16%로 증가했기 때문임. 즉, 공급사슬 붕괴, 생산 차질 지속, 소비 위축 등이 중국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IMF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률 감소 폭을 0.2% 내외로 전망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며 이른 시일 내에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 중국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 하방 압력 급격히 증가

- OPEC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2020년 석유 수요의 증가 규모를 122만 배럴/일로 전망했지만, 확산이 본격화되자 23만 배럴/일이 감소한 99만 배럴/일로 수정 전망함.
  - 여행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중국의 일일 석유 수요는 평균 19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수요 감소 외에도 국가별 석유 수요 부진을 고려할 때 OPEC의 수요 감소 예측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
  -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다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새로운 석유 수요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이런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 여부는 석유 수요 감소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중동의 지정학 불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던 국제유가는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이 뚜렷해지면서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약 20% 급락함.
  - <그림 1>에서 보듯이 1월 20일 배럴당 65달러였던 국제유가는 2월 10일에는 54달러에도 미치지 못함. 이와 같은 유가의 급락은 2020년 세계 석유 수요 감소에 대한 잠재된 시장의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함.



<그림 1> 브렌트유 일일 평균 유가 동향



자료 : Bloomberg.

## 2020년, 생산량 감축보다는 수요 위축으로 부진한 국제유가 지속 가능성 커

- 석유 수요 감소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과장되었을 수 있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인임.
  - 코로나19 확산이 3월 말이 되어서야 통제될 경우 2020년 중국의 연간 석유 수요 증가율은 2.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에너지 소비 감소를 고려한 이전 전망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하방 압력이 증가한 국제유가를 위해 OPEC+ 중심의 추가 감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러시아와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러시아는 긴급 감축이 필요한 이번 경우처럼 OPEC과의 협력을 빌미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임.
  - 전술한 중국의 수요 감소와 OPEC+의 감산 실패 및 이란 제재 등으로 인해 2020년 세계 석유 수요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S&P Global Platts는 세계 석유 수요가 일일 최대 410만 배럴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고 전망함.
- 코로나19 확산은 국제 석유시장이 경험한 바 있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등과 달리 경제성장률 하락과 그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라는 형태로 국제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주력 시장인 중동과 플랜트 부문이 국제유가의 등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 ESG, 건설기업 가치 제고 요소로 부각

- ESG는 사회적 책임 지표, 건설기업의 상시적 저평가 해소에 도움 -

### ■ CSR, 기업의 미래이익 창출을 통한 장기 생존력 제고 요소로 부각

- 최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이행 여부가 기업가치 평가의 새로운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음.
  - 급격한,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영의 목적이 ‘주주 이익의 극대화’에서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번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기업 경영의 목적 변화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또한 기존의 소비자와 노동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수행이라는 협의적 사고에서 국가의 사회복지 및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익을 충족하도록 변화되고 있음.
  - 이렇듯, 기업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시각이 변화됨에 따라 UN 등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수화하여 기업가치 평가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UN에서는 지난 2000년에 CSR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약(UN Global Compact)」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 173개국 약 1만 409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지난 2010년 11월, 「ISO 26000」을 제정하여 기업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업지배구조원에서 CSR을 바탕으로 거래소 상장기업 전부와 일부 코스닥 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수를 공시하고 있으며, 경실련 산하 경제정의연구소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지수화 지표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발표하고 있음.
- CSR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여 기업의 장기 생존력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임.
  - CSR의 성과가 높은 기업이 반드시 경영 성과(Performance)도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그러나, CSR이 높은 기업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인권, 소비자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해 법적·경제적·윤리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提高)할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음.



## CSR의 지수화, 비재무적 지표인 ESG 대두

- ESG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 측정을 위한 지표를 말함.
  - B/S(손익계산서), P/S(대차대조표), C/F(현금흐름표) 등은 기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주요 재무지표였으나,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목받으면서 재무지표와 함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ESG가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지표로 주목받고 있음.
  - ESG에서 말하는 ‘사회(Social)’란 다양성, 인권, 소비자 보호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을 말함. 기간제 근로자 비중, 인권 보호 프로그램의 운영, 여성 근로자 비중 등의 지표가 있음.
  - 환경(Environment)은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 등을 말함. ISO 14001의 보유 여부, 환경 정보공개 시스템과 사업보고서에의 공시 여부, 환경 관련 실무 조직의 보유 및 환경교육 시행 여부,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지표가 사용됨.
  - 지배구조(Governance)란 기업이 지속 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지배구조를 실현하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의 훼손 여지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함. 배당,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이사회 독립성, 감사기구 등의 지표가 활용됨.
    - ※ ESG를 평가하는 국내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이 있음.

## 건설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ESG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

- 국내 최대 자산운용 기관인 국민연금은 자산운용 원칙의 하나로 투자 대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운용지침 제3장(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이 다수의 건설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업가치의 합리적 평가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기업의 ESG에 관한 관심 제고가 요구됨.
  - 다수의 건설기업이 ESG 지표로 평가되고 있으며<sup>3)</sup> 국민연금 기금이 현대건설, 대림산업, 금호산업 등 국내 18개 건설기업(2018년 기준)에 투자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방향은 미래 건설기업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설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증대는 건설기업 가치의 상시적 저평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건설기업은 ESG에 활용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함.

임기수(연구위원 · kslim@cerik.re.kr)

3) 2019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상장 건설기업 51개 사(社) 중 31개에 대해 ESG 지표를 발표함.

## 기본으로 돌아가기 vs. 스케일 업

기업경영이 어려울 때면 흔히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고 한다. 신사업 발굴이니 신시장 개척이니 요란을 떨 것이 아니라, 핵심사업이나 핵심고객을 잘 지키면서 하던 일이나 잘하자고 한다. 반면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과 상품을 개척하고자 할 때는 '스케일 업'을 강조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상업화돼 큰 성과를 창출하려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그 과정을 스케일 업이라고 부른다.

해외건설의 경우 2010년대 초반에 해외 플랜트 부실로 한바탕 어닝쇼크를 겪은 탓인지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작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전년 대비 무려 31%나 감소한 223억 달러였다. 경쟁력을 상실한 단순 도급공사보다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하고자 했지만 작년 투자개발형 사업의 수주실적은 18억 달러로 총수주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도급공사 중심의 해외건설사업에 주력해야 할까? 이미 도급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선진 기업들처럼 사업개발 및 기획, 타당성 분석, 금융조달 등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1990년대의 동남아 건설 붐 때,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붐이 불 때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둔 사업은 드물다. 그러다 글로벌 경제나 건설시장이 위축되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 도급공사에만 치중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이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가 됐다. 앞으로 해외건설은 선진국형 사업이 아니면

우리 기업도 진출하기 어렵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케일 업을 이뤄야 한다. 해외 플랜트 사업도 전통적인 '상설설계(E)-구매(P)-시공(C)' 중심을 넘어서 선진 기업들의 사업영역인 사업초기 단계의 엔지니어링과 개념설계 영역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해야 한다. 시공 단계 이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영역으로도 확장해야 한다.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전통적인 현장시공 방식을 대체해 흔히 '모듈러 건설'이라고 부르는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인력 부족과 고령화의 대안으로, 신속하게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건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대형병원을 불과 10일 만에 준공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것도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공공임대주택 실증사업을 그친 뒤 올해부터 아주 조금씩 늘어날 듯한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따라서 일정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장 시공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다. 이제야 초기 단계에 막 진입한 우리나라의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케일 업이 이뤄져야 한다. 해외건설의 투자개발형 사업이건, 국내건설의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이건 간에 새로운 사업발굴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스케일 업을 추구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2020.2.20>

이상호(원장 · shlee@cerik.re.kr)